

학생이
가
시미이
도이
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바꾼 우리학교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 규범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2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공포·시행하였습니다. 본 책자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일부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 6 들어가며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그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책에 담긴 이야기
- 10 첫 번째 이야기
한국사회의 변화와 학생인권조례의 등장
- 28 두 번째 이야기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과정과 의미
- 54 세 번째 이야기
학생인권조례 활용 사례를 통해 바라본 학교 현장의 변화
- 88 네 번째 이야기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학생인권 보장 체제
- 112 부록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그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책에 담긴 이야기

학생이 행복한 학교 공동체, 그것은 모두의 바람이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소망을 담고자 한다. 지난날 우리의 학교 교육은 교문에 들어서서는 순간부터 학생을 존엄한 인간이 아니라 규율과 훈육의 대상으로 여겼다. 학생은 인권의 주인이 아니거나 아니어야 하는 것처럼 다뤄졌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잘못된 폐습을 인권의 이름으로, 그리고 교육의 이름으로 바꿔 나가고자 한다. 학생이 행복한 학교, 학생과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서울 시민의 뜻을 인권의 이름으로 엮어내고자 한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헌법에 있는 기본적인 인권 조항만으로도 충분히 학생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지역 단위의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사회는 군사정권의 억압적 통치와 성장 위주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권의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학생은 미성숙하기에 훈육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학교를 지배하는 인식이자 사회에 만연한 분위기였다. 1980년대 말부터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전반적인 인권의식은 어느 정도 높아졌으나, 학교는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였다. 체벌은 중요한 교육 수단으로 간주되었고, 학생의 옷차림과 두발은 학교가 정한 기준에 맞춰졌다. 학교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의 사생활에 개입했으며, 휴대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교실에 들어서서는 순간 학생의 손을 떠나야 했다. 여기에 교육행정과 보수 언론이 가세하여 학생인권의 가치를 사회적

일탈의 주요 원인으로 보는 편견을 양산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서울 시민의 장엄한 결단이다. 학생 당사자의 목소리와 함께 10만 명 가량의 서울 시민이 연대하여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를 위함이다. 시민들은 조례라는 형식을 통해 학생도 의연한 인권의 주체임을 세상 모두를 향해 선언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학교의 구성원이자 주체임을 확인한다. 학생이 학교생활을 비롯한 자기 생활을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을 통해 꾸려나갈 수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유형과 내용에 따라 체계화하고 정리하여 모두에게 알림으로써 학생인권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 이로써 학생의 자유가 무엇이며 학생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가 명확해지며, 학생은 학교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개인으로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동시에 학생인권조례는 상호 배려와 존중의 틀 속에서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선언함으로써 학교 안에서의 공동생활과정에 필요한 질서와 상호협력의 기회를 확보한다. 인권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동시에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하여 지고 있는 윤리적 의무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인권의 양면성을 담아낸다. 학생은 다른 학생이나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배려할 수 있는 상호협력과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어갈 의무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들은 물론 지역교육 당국이나 지역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규정한다. 학생의 인권 문제는 학교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책무임을 선언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와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그것은 학생의 인권이 공허한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존중되고 실천되는 현실의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요구한다.

이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 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제자리를 잡게 됨으로써 학생인권의 문제를 효과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장해 나갈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었다. 서울시의 교육행정에서 학생인권은 의미 있는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과 교사가 스스로의 생활을 반성하고 바꾸어내는 중요한 계기를 이루고 있다. 학생들은 이 조례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인권에 대해 학습하고 그 자유와 권리들을 위하여 스스로 혹은 교사들과 더불어 항의하고 요구하며 학교의 생활환경을 바꾸어내고자 하였다. 교사들 또한 학생들에게 인권을 교육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어내고자 애쓰며 학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학부모와 지역사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계기로 학생인권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우칠 수 있었다. 학생인권조례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인권의 수호자가 되어 권위주의 체제하에 서의 억압적인 교육 현실을 극복하고 모두가 웃으며 다닐 수 있는 행복한 학교 공동체를 만드는 출발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자는 이런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데 목적을 둔다. 서울시라는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졌던 학생인권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학교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변화와 그 변화의 가능성을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꿈을 그려내면서 학생인권을 향한 우리 모두의 이해와

공감과 협력을 끌어내고자 하였다.

1장은 학생인권조례가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학생인권의 항목들을 간단히 설명하며 그것이 지향하는 가치들을 소개한다. 또한 학생인권이 어떻게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의 등장이 다시 한국사회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개괄한다. 2장은 학생인권과 그를 위한 입법운동의 과정을 설명하며 현재의 학생인권의 현실을 구성하게 된 주요 동력과 요인을 살펴본다. 멀게는 1987년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촉발되었던 청소년인권운동에서부터 가깝게는 서울 시민들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에 이르기까지, 학생인권조례의 집행을 위해 서울 시민들과 학교 구성원들이 기울인 노력이 연표와 함께 제시된다. 3장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바뀐 학교의 모습을 소개한다. 학교 안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학생이나 교사의 시각을 통해 서술된다. 4장은 학생인권조례의 구조와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서술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과 홍보, 그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과 같은 주요한 인권행정체제가 제자리를 잡아가는 모습과 함께 교육행정이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조짐을 소개한다.



| 첫 번째 이야기 |

한국사회의 변화와 학생인권조례의 등장

2012년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어떤 취지에서 등장했고, 어떤 가치를 담으려고 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었는지 살펴본다.



행복하고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를 위한 열망, 학생인권조례

2012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는 경기도, 광주광역시에 이어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서울 시민이 만든 또 하나의 인권선언이라 할 수 있다. 10만여 명의 서울 시민이 주민 발의에 참여하여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인권 보장을 원하는 이들의 열망이 담겨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은 학생인권의 주체로서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또한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학생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배려할 의무를 갖는다.

학생인권조례의 주된 목적은 학생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스스로 일구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흔히 학생은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지나 이 조례는 그들이 실수할 권리가 있으며,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성찰 위에서 학생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학생은 공포와 폭력, 그리고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스스로의 인격을 형성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의 인권은 최대한,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들의 생활은 충분한 지원과 원조를 받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학생의 삶이 나날이 행복해질 수 있는 학교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총 51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학생인권조례는 단순히 학생인권을 열거하는 차원

에 그치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자신의 인권을 바탕으로 교우, 교사 또는 지역사회 및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학생에 대해 어떠한 지원과 배려와 돌봄의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공허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긴밀한 연대와 공감, 상호배려의 윤리를 바탕으로 하여 존중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형성되는 인권공동체 속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보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조례는 학생인권보장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총칙(제1장)에 이어 ▲학생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제2장), ▲학생인권보장체계(제3장),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제4장), ▲보칙(제5장)으로 구성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권체제를 구축한다. 교육청은 학생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교육청과 학교에 학생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학생인권에 익숙해지도록 홍보해야 한다. 또한 ‘학생인권의 날’을 정해 학생인권이 서울 시민과 함께 실천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인권의식이 확산되게끔 노력해야 한다.

요컨대,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헌법과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한국의 학교현실에 부합하는 학생의 인권을 선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교육청, 학교, 그리고 학생, 교사,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 공동체의 협업을 통해 행복하고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서울 시민의 열망을 담았다.

민주화 이후 학교교육의 재구성 요구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모범적인 발전 모델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곳곳에는 고도성장의 부작용에 따른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학교 교육도 예외가 아니었다. 산업화 시기 교육은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면하고 성실한 일꾼을 길러내는 수단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을 권위주의적 통치에 길들이는 훈육의 장이었다. 한국 학교가 지나치게 경쟁을 강조하면서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학생을 교육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그저 훈육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 학교는 학생의 생활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데 주력하였을 뿐 학생 스스로 자유롭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지 못했다. 또한 한국의 권위주의 정치는 교육을 효율적 통치를 위한 훈육 수단으로 간주하여 한국 사회에서 시민의식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 수준이 향상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학생인권의 실현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한국이 민주화의 단계로 들어서면서 학생인권은 사회적 관심사이자 동시에 정치 의제로 등장하였다. 먼저 국가가 주도하던 획일적 교육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학교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교육하며,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만들어나가는 주체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학교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요구된 것이다. 여기에 한국 사회에서 오랜 역

사와 전통을 가진 학생운동은 학교 공동체를 바꾸는 주된 역할을 하였다. 학생운동은 종래의 정치운동에서 청소년인권운동 및 학교개혁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학생을 단순히 훈육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거부하였다. 학생은 학교생활의 구성원이자 엄연한 주체이며, 그에 상응하는 인권과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학교 교육은 학생의 인권 보장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되었다. 주민들은 학교교육이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아동권리협약 제29조)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그리고 최대한으로 구현하는 교육과 학교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학생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통제되고 강제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대신 학생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권리를 가지며,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경험과 성찰 위에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학생이 언제나 자기 삶의 주체로서 존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쌓기 위한 학습의 장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생활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법의 공백을 메우다

하지만 이런 변화도 한국사회를 학생인권의 편으로 돌려내지는 못하였다. 종래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하는 일부 교육자와 학교관리자는 학생인권의 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학교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 또한 민주시민의 양성보다는 경쟁을 우선하는 주입식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학교 교육의 효율성과 학교의 질서를 해치는 위험요소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학생과 교사의 갈등은 물론 학생인권에 친화적인 교사와 기존의 교육 방식에 익숙한 교사 사이의 갈등 또는 학교관리자와 교사의 갈등 등 수많은 충돌과 분쟁이 발생하였다.

민주화 과정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의 의식이 어느 정도 바뀌기는 하였다. 학생인권을 확인하고 그를 보장할 의무를 학교에 지우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교문 안에서의 학생인권은 한계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학생인권이라는 추상적인 법 규정은 만들어졌지만, 이것을 구체화하여 모든 학생이 어엿한 인간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때에는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학교 운영이나 교육행정과 같은 교육문제를 상대 정파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바람에 마치 학생인권이 모든 교육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비난받기도 하였다.

한국정치 상황의 한계로 인해 학생인권은 ‘국회’라는 중앙 정치과정을 통해 전국 단위의 학생인권법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지방자치 단위의 법인 조례를 통해 입

법되었다. 즉,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이 아닌,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역 학생의 인
권만이 법적 근거를 갖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의 민주화는 지방자치제의 전
면적인 실시와 함께 시작되었고, 교육행정이 지방자치제로 전환하면서 학교혁신
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요구가 확산되었다. 보수적 성향을 띤 정치인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지역에서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진보적인 교육
자를 교육감으로 선출하여 학교의 혁신을 도모하였다. 이후 지방교육행정의 주요
한 의제로서 학생인권이 등장하거나, 또는 서울시와 같이 학생을 포함한 시민들
이 주민발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였다. 중앙정치가 제대로 해결하
지 못하는 학생인권의 문제를 지역 주민과 그 인권의 주체인 학생이 스스로 혹은
그 대표자인 교육감을 통해 실천을 주도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기본가치

학교는 학생의 일과 생활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학생 생활에 가장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기에 학교는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공간이 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서울시의 모든 학교가 ①“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공동체” ②“평화로운 학교 공동체” ③“민주적 학교 공동체”라는 세 가지의 지도이념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행복한 배움 공동체가 될 것을 요구한다. 모든 학생이 스스로의 삶을 자유롭게 펼쳐나가며 그 인격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 갈등과 분쟁보다 상호 배려와 존중으로 다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학교,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거리낌 없이 참여하고 연대하여 공동의 생활공동체를 구성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여기서 서울 시민이 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은 본질적으로 달라졌다. 이전과 달리 학교는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공간이어야 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다양한 생활방식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서로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모두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그 결정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는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 1 학생의 인권이 구체적이고 빠짐없이 잘 정비되고 학교생활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제반의 여건과 자원이 충실히 확보되어야 한다.
- 2 학생인권을 학교구성원들과 지역주민, 국가 등이 상호 협력하고 배려하는 「모두에 대한, 모두와 함께 하는 자유」(Freedom to and with Everyone)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계획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3 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교 구성원의 인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시민의 인권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내용과 체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 4 학생을 배려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능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인권의 주체로 대우하여야 한다.
- 5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와 그 위험에 대한 예방의 조치가 완비되는 학생인권기구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 모두가 행복한 학교, 그리고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서로를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하였다.



1)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외,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낸 변화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단순한 교육의 객체이거나 훈육의 대상으로 간주하던 과거의 폐습을 과감하게 떨쳐 버리고자 한다. 학생은 교사, 학부모와 함께 어엿한 학교의 구성원이며 스스로의 힘으로 혹은 다른 구성원과 어울려 자신의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주체적 인간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정리하고 있으며, 학교의 모든 구성원과 학교 밖의 모든 사람이 학생의 행동과 생활, 의지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유형별, 내용별로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으로 만들었다. 학생이 자신에게 어떠한 자유와 권리가 있는지, 그것이 학교생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아가 그것을 누리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기구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학교생활 속에서 스스로 익히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국가가 어떻게 학생을 지원하고 배려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학생인권조례의 목표는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존엄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존중받는 인권 중심의 사회, 인간 존중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이와 같은 생각은 단순히 하나의 바람에 멈추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



2011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
출처 | 참세상

면서 학생들은 스스로 혹은 교사와의 교감과 협력을 통하여 학교생활 속에서 자신의 인권 의제를 발굴해내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체벌이나 폭력적인 훈육 방식들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용모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맞서 개성을 표현할 자유를 요구하였다. 학생들은 강제적인 종교 교육의 중단이나 대체교육의 실시를 요구하였고, 학교관리자가 학생회 임원의 선거과정에 개입하는 관행에 맞서 문제를 바로잡고자 노력하였다. 이 모든 노력을 통해 학생들은 그동안 학교에서 지도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알게 모르게 실시되었던 반인권적 폐습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생을 억압하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과 함께, 학생에 의해 행복해지는 학교가 될 수 있게 노력하였다.

학생인권조례의 성과는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 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학생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살아가는 교사의 생각과 교육철학,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많은 교사와 학교관리자는 학생을 교육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았으며, 획일적인 규율을 강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이들이 스스로의 교육관을 반성하고 교정하는 가장 강력한 자극제가 되었다. 한 교사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교규칙의 개정해 학생이 참여하게 되면서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 학교규칙이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 폐지되었어요. 그리고 나니 예전에는 학생들의 발만 보고 있던 나의 시선이 비로소 학생들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었어요.”라고 말했다. 이 교사의 이야기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과 교사로 이루어지는 교실의 상황을 어떻게 바꾸어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구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다루는 동시에, 보편적인 존재로서의 인간과 인권 그 자체를 다루는 것이기도 하다. 학생의 인권이 학교생활의 주요 의제가 된다는 것은 동시에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또한 주요 의제로 떠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생의 행동과 생활을 통제한다는 명분으로 교사에게 과도한 학생 ‘지도’ 업무가 주어졌던 과거에 대한 반성뿐 아니라, 학교나 학급운영이 획일적으로 이뤄지는 관행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 역시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공동체로의 변화라는 학생인권조례의 목표에서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교는 그 시대와 사회의 축소판이듯, 학생인권은 곧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수준을 보여준다. 학교 안에서 학생이 주도하였던 학생인권 담론은 시민사회에서 더욱 거시적인 인권 의제로 확대되었다. 즉,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시행을 둘러싼 학생, 시민 사회의 인권 담론과 의제가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온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으로 인하여 학생인권조례는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된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시행은 ‘민주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성과인 동시에 한국사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인권 중심’, ‘인간 중심’의 공동체라는 사회발전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학생인권조례에서 정한 학생인권의 주요 내용

학생인권의 보장원칙

학생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제3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성별, 신체조건, 임신·출산, 성적 지향·성별정체성, 성적 등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학교는 이러한 차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평등을 실현할 의무를 질 뿐 아니라 학교 안에서 혐오표현과 같은 차별적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에 대한 체벌이나 언어폭력, 따돌림, 모욕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교육감, 학교장 및 교직원에게 이러한 폭력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제6조).

학습 및 휴식에 관한 권리

학생은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권을 가지며, 과도한 학업경쟁에 시달리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과도한 선행학습을 받지 아니하며 휴식권을 보장받는다(제8조, 제10조). 아울러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제9조).

문화를 향유할 권리

학생은 건강하고 다양한 문화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할 수 있게 하였다(제11조).

사생활의 자유와 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생은 복장·두발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제12조). 또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어 안전상의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지품검사가 금지되고, 학교 안에서 휴대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생이 참여하여 정한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였다(제13조). 아울러 성적, 가족관계, 징계기록 등과 같은 개인정보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제14조),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제15조).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특정한 종교행위나 반성·서약 등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제16조). 또한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가지며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으고 자유롭게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진다(제17조).

자치 및 참여의 권리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운영과 학교규칙의 제·개정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를 가진다(제18조). 나아가 학생은 학교규칙의 제·개정이나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제19조, 제20조).

복지 및 건강, 급식에 관한 권리

학생은 인권의 실현을 위하여 상담 등 학교와 서울시의 배려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제21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2조). 또한, 안전한 먹거리에 의한 급식을 받을 권리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제23조, 제24조).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및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학생은 징계절차에서 인권적이고 정당한 규정과 적절한 절차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징계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제25조). 아울러 학생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제26조), 인권보장에 관한 상담과 청원을 하고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27조).

소수자학생의 권리

빈곤학생, 장애학생, 한부모가정학생, 다문화가정학생, 외국인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학생은 적절한 보호와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는 소수자에 대한 진로·취업·상담프로그램과 함께 편견과 차별의식을 없애기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학생에 대한 편의 제공과 빈곤학생에 대한 지원, 다문화·이주민가정 학생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그의 고유문화를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제28조).



| 두 번째 이야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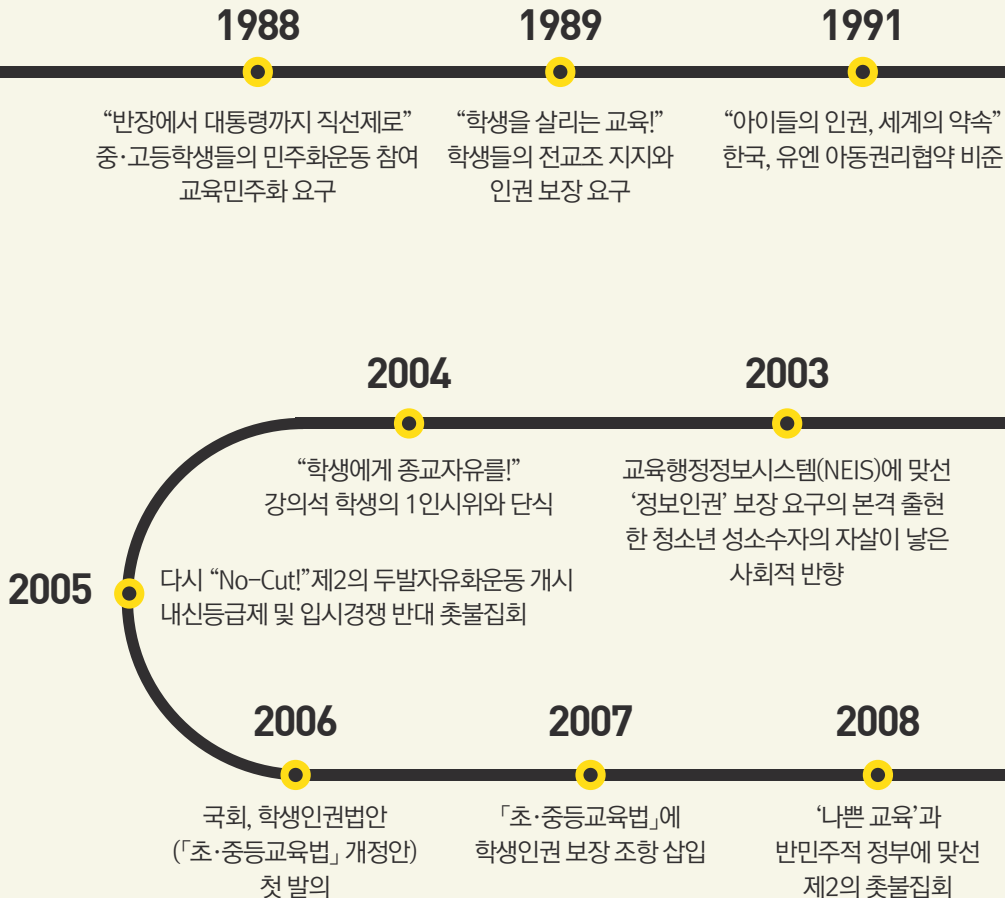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과정과 의미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물이 아니다.
학생인권의 보장을 향한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이 조례 제정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차례로 짚어본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하기까지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탄생을 이끈 전사(前史)



한 눈에 보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전사(前史)

1995

“방과 후와 방학시간을 돌려달라!”
최우주 학생의 헌법소원 추진과
‘중·고등학생복지회’ 결성

1998

교육부,
학생인권선언 제정 시도

“No-Cut!” 학생에게 두발자유를!
온라인 서명운동 및 캠페인

2000

2002

“신효순·심미선을 살려내라!”
청소년 주도의 첫 촛불집회

2001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2010

전국 최초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 개시

2011

주민발의 성공과
의회 통과

201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공포·시행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존엄한 인격체이자 시민으로 대접하려는 오랜 노력의 결실이다. 11월 3일 ‘학생의 날’의 기원이 된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의 과정에서도 학생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는 동시에 학생인권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 아래에서는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독자적으로 전개된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의 전사(前史)를 살펴보기로 한다.

1988년 “반장에서 대통령까지 직선제로”

중·고등학생들의 민주화운동 참여 및 교육민주화 요구

군부독재에 맞선 1988년 민주항쟁에 중·고등학생도 대거 참여했다. 학생들은 정치·사회적 민주화와 함께 학생회 직선제, 강제보충수업 폐지, 두발규제 철폐 등 교육민주화를 동시에 외치며 전국 곳곳에서 시위와 농성을 전개했다.

1989년 “학생을 살리는 교육!”

학생들의 전교조 지지와 인권 보장 요구

1989년 5월 비민주적인 교육현장을 바꾸고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출범했다. 정부의 불허 방침으로 교사들의 대규모 해직사태가 이어지자 이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행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학생들은 전교조 지지와 함께 강제보충과 두발규제 폐지 등을 함께 요구했다.

1991년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한국,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

1989년 11월 20일 유엔은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와 정부의 보장책임을 규정한 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ren)을 채택했다. 한국정부는 1991년 11월 20일 이 협약을 비준하여 이를 이행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지게 되었다.

1995년 “방과 후의 시간을 돌려달라!”

최우주 학생의 헌법소원 추진과 ‘중·고등학생복지회’의 탄생
 춘천고등학교 1학년 최우주 학생이 “강제적인 보충수업과 자율 학습은 학생의 시간을 빼앗고 학생 의견을 묵살하는 헌법 위반”이라며 정부에 민원을 제출했다. 이 글을 계기로 학생인권에 관한 온라인 논의가 불타올랐다. 그해 말, 최초의 학생인권단체인 ‘중·고등학생복지회’가 결성됐다.

1998년 교육부, 학생인권선언 제정 시도

‘인권 대통령’을 표방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교육부는 ‘학생 인권선언’ 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교육부 안팎의 우려와 반발에 부딪혀 제정이 무산됐다.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며 중·고등학생복지회가 11월 3일 ‘학생인권선언서’를 발표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학생인권 목록을 구체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문서이다.

2000년 “No-Cut!” 학생에게 두발자유를!

온라인 서명운동 및 캠페인



청소년의 인터넷 커뮤니티들과 ‘전국중·고등학생연합’이 진행한 두발자유 서명에 무려 16만 명이 참여했다.

두발자유를 비롯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캠페인이 이어졌다. 사회적 반향이 커지자, 교육부는 ‘학교별 토론회를 열어 두발 규정을 개정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2001년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전국중·고등학생연합과 인권운동사랑방이 전국 244개 중·고등학교의 교칙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학생인권을 침해해온 구시대적 교칙의 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2년 “신효순·심미선을 살려내라!”

청소년 주도의 첫 촛불집회

한 고등학생이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으로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두 여학생의 죽음이 사회에 널리 알려졌다. 미국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1년 넘게 이어졌고 학생들의 집회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집회 참여를 막는 학교와 교육 당국에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요구했다.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맞선

정보인권 보장 요구의 본격 출현

교육부가 학생·학부모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대거 집중시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을 시도했다. 인권단체와 교육단체 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나서서 정보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캠페인과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정보인권’이라는 개념이 한국사회에 각인되는 계기가 됐다.

2003년 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이 낳은 사회적 반향

19살 청소년 성소수자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죽음으로 폭력과 자살의 위험에 내몰린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가 집중 조명되기 시작했다.

2004년 “학생에게 종교의 자유를!”

강의석 학생의 1인 시위와 단식

기독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강의석 학생이 강제 예배 반대와 종교 자유 보장을 요구하며 교육청 앞 1인시위에 나섰다. 이에 학교가 퇴학 징계를 내리자 강의석 학생은 45일에 걸친 단식으로 맞섰다. 결국 학교는 퇴학을 취소하고 예배 참석 자율권을 약속했다.

2005년

다시“No-Cut!”

제2의 두발자유운동 개시, 내신등급제 및 입시경쟁 반대 촛불집회

두발규제 폐지를 촉구하는 학생들의 외침이 다시 울려 퍼졌다. 학교 안에서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두발자유를 외치는 학생들도 있었고, 두발자유운동본부가 결성되어 청소년들의 행동을 지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두발자유는 학생의 기본권’이라는 결정문을 발표했다. 또한, 5월에는 내신등급제에 대한 불만으로 학생들이 약 1000명가량 모여 입시경쟁교육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2006년

국회,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첫 발의

두발자유, 체벌금지 등 기본적인 학생인권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최순영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 통과를 바라는 100만인 서명운동과 청소년들의 행진, 집회 등이 이어졌다.

2007년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보장 조항 삽입

학생인권법 제정 운동의 결실로 「초·중등교육법」이 마침내 개정됐다.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 조항이 삽입되었으나,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추상적인 조항 하나가 삽입되는 데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2008년 ‘나쁜 교육’과 반민주적 정부에 맞선 제2의 촛불집회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을 달궜다. 처음 촛불을 든 이들은 중·고등학생이었다. 청소년들은 ‘자율화’를 명목으로 학생인권에 관한 정부지침을 삭제해 버린 ‘4.15 교육자율화 조치’와 일제고사 부활을 반대하는 운동을 이어나갔다.

2010년 전국 최초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2008년 최초로 시행된 교육감 직선제로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009년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인권 전문가들과 청소년 활동가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2010년 10월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전국 최초로 공포·시행됐다. 같은 해 6월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도 대폭 늘어났다.



〈2011년 4월 19일 청소년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호소하는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출처 | <오늘의 교육> 최승훈 기자

2010년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 개시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조례 제

정 운동이 확산됐다. 2010년 7월, 서울에서는 교육·인권·청소년 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를 결성하고, 서울 시민의 힘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한 주민발의 운동을 시작했다.

2011년 주민발의 성공과 의회 통과

2011년 5월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성공했다.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자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12월 19일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2012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공포·시행

2012년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공포했다. 2010년 경기, 2011년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시행된 학생인권조례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가 공포·시행된 이 날을 ‘학생인권의 날’로 지정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발걸음

학생인권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법률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이 유일하다. 그러나 두 법률에는 ‘학생(학습자)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추상적인 조항만이 담겨있어 무엇이 학생인권이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교육청과 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책무를 지고 있는지가 모호하다. 학생인권조례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제정한 자치법규이다. 서울 시민

들은 직접 조례안을 만들고 제정을 청구하는 ‘주민발의 제도’를 통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주민발의 제도는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성사될 수 있다.

학생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정치·사회적 약자이다. 주민발의에는 선거할 권리를 가진 유권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데, 학생은 유권자가 아니어서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할 권리조차 없다. ‘학생에겐 권리보다는 보호와 통제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시민의 힘으로 만들자는 주민발의운동은 실패의 우려가 큰 시도였다. 게다가 조례 제정을 위해 필요한 서명은 8만 명 이상의 서울시민 유권자로부터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친필서명까지 받아야 했기에 어려운 절차이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은 10만 명에 가까운 서울 시민의 서명을 받아 결국 성공했고, 조례 제정을 끌어냈다.



2011년 4월 18 불광중학교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출처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당시 서울시교육청 역시 주민발의 운동과 별도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교육청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 현장과 교육청 내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다. 그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었고, 학교구성원의 학생인권에 관한 이해와 토론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주민발의안이 접수된 이후 교육청은 주민발의로 만들어진 조례안에 대해 성실한 법제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냈고, 의회의 심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교육청이 애초 준비하던 조례안은 다양한 이유로 의회에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에 관한 내용은 주민발의안에 비해 더 실효성이 높아 의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반영되기도 했다. 결국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주민발의를 통해 탄생하였지만, 내용 면에서는 교육청 발의안과 주민발의안이 통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학생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노력에 교육청의 적극적 태도가 더해졌기에 가능했다.

한 눈에 보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추진 과정

7월 7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출범

5월 10일

경기·서울·인천 교육감 후보,
시민사회단체와
‘학생인권조례 및
학생인권 신장 정책협약식’ 개최

2010

9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결성

10월 18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의
‘학생인권에 관한 의식 조사’
(4,322명 대상) 결과,
학생, 교사, 학부모 80% 이상이
학생인권조례 필요하다고 응답

10월 18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공청회 개최

10월 18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청구서 제출,
주민발의 서명 시작

2011

5월 1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기간 완료

4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총 11차례 지역순회공청회 개최

2012

1월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5월 17일
서울시교육청 1기 학생참여단
(참여단 100명) 발대식 개최

1월 27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 지시

5월 31일
서울시교육청
1기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19명) 발족

12월 19일
서울시의회,
서울학생인권조례
일부 수정안 통과

12월 13일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 결성.
서울학생인권조례 부결 촉구

12월 14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 촉구
서울시의회 농성 돌입.
각계에서 지지 성명 발표

9월 30일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서울시의회로 송부

5월 20일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제출.
서명이나 정보가 누락된
무효 서명지 1만여 장 발견

9월 8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청회, 온라인 의견 수렴,
각 부처 의견수렴 등 진행

7월 5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청구인명부
추가 3만여 장 제출

8월 4일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청구 수리.
유효 서명인 수 총 97,702명으로 확정

서울학생인권조례 탄생의 의미

주민발의로 탄생한 최초의 학생인권조례

현재까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4곳이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다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주민발의로 제정된 전국 최초의 조례이자 현재까지는 유일한 조례로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첫째,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사례다. 주민발의제도는 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와 함께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식이다.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 조례안을 만들고 시민의 힘으로 제정된 ‘민주적 조례’이기에 교육청이나 의회에서 함부로 훼손하기가 힘들다.

둘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과정은 학생인권에 관한 살아있는 사회적 학교였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큰 의제에 대해서는 서명을 받기가 쉽지만,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의제는 시민들을 설득해 서명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당시만 해도 학생인권은 사회적 관심이 크지 않은 의제였다. 따라서 주민발의 서명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학생인권의 현실과 보장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었다. 학생인권조례의 당사자인 학생은 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례 청구 서명에 참여할 수 없었음에도 청소년들은 적극적으로 학생인권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는 시민들로부터 서명 동참을 끌어냈다. 그 결과, 주민발의도 성

공하고 조례도 제정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학생인권에 관한 사회적 학습이 일어나고 사회적 공감대가 확장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
출처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셋째, 타 지역 학생인권조례에 비해 가장 선도적인 조항들이 포함되었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는 두발자유가 명시되었고, 집회의 자유가 처음으로 명시되었으며, 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위한 조항도 최대한 구체화되어 있다. 학생인권을 위한 증진체계도 다른 지역의 조례에 비해 실효성이 높게 설계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학생인권의 교육적 의미 확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 역시 컸다. 학생인권이 ‘하면 좋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었을 때 사회적 논쟁은 불붙지 않았다. 학생인권을 둘러싼 논쟁이 격렬해졌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학생인권

이 ‘해야 하는 것이고 곧 도래할 현실’이 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결국 제정에 성공했고, 학생인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한 단계 도약하게 했다.

1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워야 책임지는 법도 배운다.”

학생인권을 이야기하면 ‘학생은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존재다’, ‘미성숙한 학생에게 인권은 이르다’와 같은 반론이 이어지곤 했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도 존엄한 인격체다’, ‘학창시절은 인생의 대기실이 아니다’, ‘학생에게 인권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성숙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워야 책임지는 법도 배운다’고 답하며 시민과 교육 주체들을 설득해 나갔다. 과거에는 ‘학생이 인권은 무슨 인권이냐!’는 이야기가 많았던 반면,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전제는 그 누구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 시민성의 핵심이 뭐냐. 주체성과 비판성, 그리고 연대성입니다. 생각하고 토론하고 세상에 대해 발언하는 경험이 주체적 시민이 되는 과정이고, 그게 시민교육의 핵심입니다. 규칙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책임감이 생기고, ‘자율성’에 의해서 약속이 지켜집니다. 매로 통제하는 교육은 시민교육이 아니죠.

홍세화(주민발의 청구인 대표, 언론인)

“ 어려서부터 자기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 세대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학생인권조례를 보면서 제가 많이 배

웠어요. 아이의 생각과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요즘 학생들은 우리가 생각 못 하는 어떤 부분을 집어내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위기에요. 그래서 생각했죠. 가르치려 들지 말고 우리가 빨리 아이들의 감수성을 따라가야겠구나. 그러다 보니 아이와 내 관계가 좋아져 있더라고요.

김영미(어린이책시민연대, 학부모)

2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학생인권을 이야기하면 ‘교육현장이 혼란스러워진다’, ‘인권보다는 교육이 먼저다’, ‘미성숙한 학생에게 특정한 생각을 주입할 수 있다’와 같은 반론이 이어지곤 했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는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학생인권의 반대말은 교육이 아니라 강압/폭력/차별이다’,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민주시민 교육의 핵심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답하며 시민과 교육 주체들을 설득해 나갔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하여 ‘민주공화국의 학교’로 가는 길이 좀 더 확장되었다.

“ 가르침을 주어야 학생들이 배운다고 흔히들 생각하죠. 그러나 배우지 않으려는 학생을 가르치는 건 불가능합니다. 배움의 시작은 질문과 호기심입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질문을 던질 자유 없이는 배움이 일어나지 않죠.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학생들은 교사의 말을 경청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질문하고 판단할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기 몸이 놓인 자리에서 문제를 응시하고 해결을 모색하며 타인을 환대하는 법을 익히는 것 이야말로 인권이고 교육이 아닐까요?

배경내(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제정자문위원)

“ 인식의 틀이라는 게 일단 형성되고 나면 잘 변하지 않죠.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의 가치나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들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려는 거고, 조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사회를 움직이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먹고사는 문제에만 완전히 압도되어 버리면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고 혐오하게 되죠. 요즘은 SNS를 통해 개인이 하나의 언론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존엄이 뭔지, 어떤 표현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지 아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교육이 더 중요하죠.

신윤동욱(〈한겨레〉 기자)

3 “마음속의 응원부대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성소수자 학생이나 비혼모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이 동성애나 임신·출산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전체를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학생인권조례에 관련 문구가 삽입되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에게 비교육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것은 해괴한 논리다’, ‘이들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야말로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성소수자 학생의 폭력과 자살 경험률이 다른 학생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아 인권 보호와 교육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를 향한 차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는 말로 시민과 교육 주체들을 설득해 나갔다.

이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2017년 9월 학생인권조례에는 ‘혐오 표현 금지’ 조항이 추가되기도 했다.

“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때문에 폭력과 차별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느 곳이나 있습니다. 심지어 안전해야 마땅할 학교나 교육기관 등에서조차도, 학생들과 교사들이 동성애 혐오로 인한 폭력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에 담겨있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2013년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유네스코 가이드북> 한국어판 서문 중에서)

“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고 심지어 수학여행 갈 때 빈곤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된 게 인상적이었어요. 청소년기를 통과하는 건 일종의 생존 경험인데, 학생인권조례가 ‘마음속의 응원부대’ 같은 느낌이랄까. 어떤 이들에게는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신윤동욱(〈한겨레〉 기자)

“ 학생인권조례를 보며 생각했어요. 손바닥에 자해를 한 날도 지각했다고 피딱지도 덜 맺힌 손바닥을 맞았고, 수업 중에 동성애 비하 발언이 나오면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고, 체육 시간에 몰래 내 가방을 뒤졌다는 사실을 알아도 아무 말 못 했던 학교에서의 나날들을 위로해주는 언어들에 여기 담겨 있구나. 차별 금지 사유들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을 삭제시킨다는 것은 ‘누군가는 차별 대상이 되어도 된다’는 말이었어요. 결국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출산’이 명시된 채로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친구들과 끌어안고 눈물을 흘

렸습니다.

의회 농성에 참여했던 청소년 성소수자

4 “학생이 행복하지 않은 학교에서 교사도 행복하기 힘들다”

학생인권을 이야기하면 ‘교권’의 위축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다. ‘왜 학생인권만 이야기하고 교사인권은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이들도 많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는 ‘인권 보장이라는 기본 책무를 지키면서 교권은 행사되어야 한다’, ‘학생인권과 정당한 교권은 상생 관계다’, ‘학생을 억압하는 교육은 교사도 억압한다’, ‘학생을 존중하는 교육이 교사를 존중하는 교육을 만든다’고 답하며 시민과 교육 주체들을 설득해 나갔다.

‘교권’이 교사인권의 줄임말이라면 교사인권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교사에게도 양심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부당한 업무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등이 있다. 강제 야간자율학습은 교사의 강제 야근 없이는 성사될 수 없음을 고려하면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은 서로 기대어있다. ‘교권’이 교사 교육권의 줄임말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은 잘못된 교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부정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학생을 체벌할 권리를 ‘교권’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자 체벌에 의존하지 않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모욕하는 일이기도 하다. 체벌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인권 때문에 교육하기 힘들어졌다고 호소하는 교사도 있다. 학교는 교과 교육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예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약속을 지키는 법을 익히는 생활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통제와 처벌 중심의 ‘생활지도’ 패러다임이었다면, 현재는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참여하여 정해진 약속을 지키는 ‘자율 중심

의 생활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교사의 생활교육에 대한 책임은 통제
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힘을 갖도록 돕는 데 있기 때문이다. 과거
에는 학생에게만 규칙 준수를 요구하였다면, 현재는 학교구성원 모두가 서로 지
켜야 할 생활규범을 함께 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 속에서 학생 스스로 인권을 존중하는 법을 몸으로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여
러 의식조사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인권을 존중받으면 교사인권도 존중할 것이
라고 답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구시대적 교육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생의 새로운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학생들에게 억압적인 학교에서는 교사도 힘들어요. 제가 수평적인
방식으로 소통하려 해도 학생들이 워낙 억압적인 방식이나 ‘힘’에 익
숙해져 있으니가 감당이 안 되고. 저는 부당한 규정이라고 생각해서
단속을 안 하는데, 우리 반 학생들이 생활지도부에는 계속 걸리는 거
죠. 애들을 잡지 못한다는 이유로 교사로서의 능력을 의심받기도 했
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변화가 필요하다, 조례라도 있어야겠다 싶
었죠. 조례가 생기고 나서는 뭔가 아니다 싶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들이 생겼어요. 교장에게 ‘이거 학생인권조례에 걸릴 수
있다’고 얘기하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학생인권이란 단
어 자체를 불온시켰는데 이제는 ‘학생들에게도 인권이 있죠. 제가 그
걸 부정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정도 변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학생들은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는 교사보다 ‘알아보고 알려줄게’
하고 진짜 알아보고 알려주는 교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
이 지식보다는 존중받는 경험을 훨씬 더 경험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
해요. 학생들이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하다 보니 학생들과

대화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확실히 학생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조영선(조례안 발의 서명에 참여했던 중등교사)

5 “학생인권과 학생자치는 학교폭력의 해결책 가운데 하나다”

학생인권조례가 의회 심의를 거치고 있는 동안 대구에서 학교폭력으로 괴로워하던 중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가해 학생을 비난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학교폭력을 없애려면 교사에게 강력한 지도권을 줘야 한다’, ‘위험천만한 학생들에게 인권을 보장하면 내 아이의 안전이 위협해진다’와 같은 우려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학교야말로 폭력과 차별의 위험으로부터 좀 더 안전한 학교다’, ‘맞을 짓을 하면 때려도 된다, 약자는 강자에게 당해도 싸다는 논리가 폭력을 키우는 만큼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학교폭력도 줄일 수 있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면서 학교폭력 발생을 줄이는 데 성공한 학교들이 있다’, ‘교사 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학생들의 자치력을 높여야 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대응력을 키울 수 있다’고 답하면서 시민과 교육 주체들을 설득해 나갔다.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은 가해 학생의 처벌에만 매몰되지 않고 가·피해학생 모두를 지원하고 ‘회복적 생활교육’을 만들려는 사회적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신탕이 되기 위해 사육되는 개들은 종종 서로 죽을 때까지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일이 있다. 자연적 생태계를 잃어버린 채 모피가 되기 위해 사육되는 밍크는 새끼 밍크를 잡아먹고, 여우농장의 여우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약한 동료를 공격하거나 자해하고 충족되지 않는 운동 욕구로 인해 반복적인 이상 행동을 보인다. 대규모 공장식 양계장에서는 그런 이유로 서로 쪼아대는 닭들 때문에 병아리 때부터 부리를 자른다.

동물사육장에서 쓰는 방법은 가해 동물과 피해 동물을 사육장에서 쫓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동물들의 공격적 이상행동은 그치지 않는다. 문제의 원인이 동물들이 아니라 사육장에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도 마찬가지다. 근본적인 해결은 사육장이 된 학교를 바꾸는 일에서만 시작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잘 정착되면 청소년들은 이제 자신이 괴물이 되는 대신 괴물과 싸우기를 선택할 것이다.

채효정(학벌없는사회 운영위원, <인권오름> 2012년 01월 18일)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불러온 법 제정 노력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시행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인권’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을 만들어 냈다. 학생을 넘어 어린이·청소년 전반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조례라는 법 제도가 내포하는 지역·법률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한국 사회의 인권의식을 드높이는 큰 힘이 되었다.

첫째, 경기도에 이어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다른 지역의 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학생인권법 제정운동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서울에서 조례 제정 주민발의가 성공하고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던 2011년 11월, 광주에서 2번째 학생인권조례가 공포·시행됐다. 이후, 경남과 충북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성사됐다. 강원, 전남, 전북 등의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했고, 2013년 8월 전북에서 4번째 학생인권조례가 공포·시행됐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장 공약을 내건 후보들이 다수 당선 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인권이 교육정책의 주요 의제로 그 위상이 확장 되었음을 보여준다. 학생인권 보장이 시대적 과제가 되면서 학생인권에 관한 상 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역적 차이와 한계가 존재하는 시·도별 학생인권조례를 넘어선 상위법의 제정을 통해 학생인권 보장의 확고한 법률 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출처 | 촛불학생인권법제정연대

둘째,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학생을 넘어 학교 바깥에 있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한 관심도 환기했다. 2012년 서울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어 학생인권조례가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 있는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틀을 쌓았다. 이후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나 「청소년노동인권조례」,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었다. 또한 아동친화도

시를 만들고 어린이·청소년이 참여하는 정책기구를 만들고자 하는 지역도 늘어났다. 학교 안팎의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어린이·청소년 인권법’과 같은 기본법 제정이나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 세 번째 이야기 |

학생인권조례 활용 사례를 통해 바라본 학교 현장의 변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생들은
용기를 내어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민원을 신청하기 시작했고,
의미있게 해결된 사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고,
조례를 통한 변화를 경험한 학생과 교사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어본다.



민원을 통해 학교의 변화를 일군 이야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일부 학교에서 학생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가 생겼다고 하여 그 자체로 모든 학교 구성원의 인권의식이 일시에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분명히 달라진 점이 있다. 바로 피해자의 민원신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진 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신고나 민원을 제기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었으나, 교육청 내에 학생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는 어려웠고, 학생인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했던 탓에 이따금 피해자 및 민원 신청자의 신원이 드러나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서울시교육청 내에 인권전담 기구인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설치되면서 학생인권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하나의 창구로 모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민원처리는 이전보다 빠르고 정확해졌다.

이 차이는 학생들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학생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말할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더는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참으려고만 하지 않게 되었다.

아래의 사례들은 그동안 용기 내어 민원을 신청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통해 문제 해결의 과정을 겪은 사례들이다. 사례 대부분이 확실하게 문제가 해결되거나, 가해자로부터 가해 사실에 대한 인정을 끌어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점점 용기 내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학교도 학생인권침해 상황의 문제점을 점차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용기와 인정이 모여 학생인권조례의 정착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폭력 없는 학교를 원해요!” – 체벌과 언어폭력 해결 사례

A교사는 학생들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종이를 말아 만든 막대기로 체벌을 가하였다. 엉덩이를 발로 차거나 학생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후 직위해제 되었다.

B교사는 자신의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이 수업과 무관한 질문(교사의 담당 동아리 모집에 대한 질문)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 조치하였다. 또한, 해당 학생이 빈정거리고 자신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정강이를 구둑발로 차고 뺨을 때렸다. 피해 학생의 신고 후 조사과정에서 해당 교사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고 잘못을 통감하며 성숙한 태도로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약속했다.

C교사는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플랭크 자세의 열차려를 주었고, 그 과정에서 언어폭력도 행사했다. C교사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일이 재차 일어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다음 학기에도 학생들에게 같은 열차려를 주었다. 이에 학생인권옹호관은 징계를 제청하였다.

D교사는 학생의 외모 등을 비하하거나 ‘이 자식’, ‘이 새끼’, ‘날씬한 X’, ‘뚱뚱

한 X' 등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 그 중 한 여학생에게는 “미스 O”라고 호명하며 “내가 니들 나이면 미스 O에게 대쉬해 볼 텐데”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D교사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으면서 그저 자신을 교육청에 신고한 학생을 찾는 데 급급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은 관련자가 인권 및 성차별 등과 관련된 직무연수를 이수하도록 하고, 서면 경고하도록 학교 측에 권고하였다.

E교사는 숙제를 해오지 않거나 쉬는 시간에 뛰거나 싸우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1층부터 4층을 걸어서 왕복하게 하였다. 또한, 한 학생이 몸이 좋지 않아 구토를 하였는데, 이를 주제로 글쓰기 숙제를 내주기도 했으며 학부모 간담회에서 “젓가락질을 못 하거나 연필을 잘 못 잡는 학생은 울려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학부모들은 담임교체를 요구하며 집단민원을 신청했고 학생인권옹호관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침해되었음이 인정된다며 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진행하도록 하며, 담임교체와 관련된 문제를 학생, 학부모, 교사 세 주체가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체벌은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고문의 일종으로 분류될 만큼 잘못된 훈육 방식이지만, 그동안 한국의 학교에서는 오랫동안 체벌이 이어져 왔다. 이에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체벌과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사례가 과반이 넘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체벌이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서울의 학생 중 일부는 체벌을 경험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법령과 조례를 통한 체벌 금지 조치가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체벌 금지 이전과 이후의 상황에 아주 큰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체벌이 사라졌고, 많은 교사들이 체벌 없이 학생을 지도하는 방식에 익

숙해져 가고 있다. 다만, 비폭력 교육으로의 변화에 수긍하지 못하는 소수가 있을 뿐이다. 그들은 예전처럼 강압적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했고, 체벌과 같은 반인권적 행위도 교육 목적이라면 용인될 수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기존 법령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체벌 금지의 법적 효과가 더 강화되었고, 조례에 따라 학생인권 전담기구가 설치됨으로써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체벌과 같은 반인권적 ‘지도방식’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발생한 체벌 사건의 중요한 특징은 체벌을 경험한 피해자가 문제의 원인을 과거와 달리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체벌의 부당함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잘 알고 있었다. 체벌은 목적의 정당성과 옳고 그름을 다룰 여지가 없는 문제이기에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상담과 조사과정도 매우 수월했다. 가해 행위자로 지목된 교사도 상담과정에서 체벌 사실과 자신의 잘못에 대해 비교적 쉽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결정된 징계를 수용하는 과정 역시 다른 사안에 비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체벌의 문제가 많은 부분 해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폭력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교사들이 체벌이라는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는 많이 감소했지만, 언어폭력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교사와 학생 모두 물리적인 폭력에 비해 언어폭력은 가벼운 문제로 인지하고 있는 등 언어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학생들은 혐오와 차별의 언어로 상처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피해 사실이 신고할 만한 사안인지 쉽사리 확

신하지 못한다.

그동안 한국의 교육현장에서는 민주주의와 소통의 가치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없었다. 다소 폭력적인 방식을 쓰더라도 성과만 좋다면 폭력이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교사들은 폭력적 방식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것에 익숙했고, 학생들도 그러한 방식에 익숙해졌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체벌과 같은 물리적 폭력이 사라지더라도 풍선효과처럼 또 다른 폭력이 늘어날 여지가 크다. 따라서 학교가 폭력과 완전히 단절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문화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 교육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고, 민주적인 과정과 상호 간의 소통이 있을 때 비로소 교육이 완성될 수 있다.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가 만난다면 폭력과 교육의 연결고리는 완전히 끊어질 수 있을 것이다.

“획일적 학생다움보다 나다움이 더 중요해요!”

- 부당한 휴대전화·용모 규정 해결 사례

A학교는 학교 생활지도규정을 통해 교내에서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하교하던 학생이 학교 밖에서 휴대폰을 사용했지만 ‘교내에서 소지했다’는 이유로 벌점을 부과받았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학생인권 옹호관은 해당 규정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지적했고, 학교는 휴대폰에 대한 소지 금지 규정을 교내 사용 금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B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과정 없이 교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당시 2학년이었던 학생 한 명이 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요청을 했지만 한 번의 신청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반복적인 상담과 조사를 통해 결국 학교 측은 휴대폰 관련 규정을 새로 개정할 것을 약속했다.

C학교의 A교사는 체육 시간에 학생의 머리가 길어 운동에 방해가 된다면 두 발을 단정히 할 것을 지도하였다. 이로부터 2주 후에 이발하지 않은 학생 중 가위·바위·보를 하여 진 학생 4명에게 교내 이발소에서 반삭발로 이발할 것을 강요했다. 또한 불응하는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겠다고 발언했다. 학생 인권옹호관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조례 위반에 대해 지적하며 해당 교사에 대한 주의 조치 및 인권교육 이수를 주문했다. 그리고 해당 학교의 규정과 이발소 운영 또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학생인권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는 향후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직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은 ‘허락된 자유’만을 누릴 수 있다. 많은 학교에서는 생활지도규정을 통하여 학생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학생의 사생활에 대해 간섭해 왔다. 또한 일괄 소지품 검사와 같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일상의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기에 학생인권조례는 개성 실현의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 조항을 포함하였다.

현재 서울에는 휴대폰 및 전자기기의 사용, 화장품의 사용, 두발 및 복장에 대한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접수되는 상담요청 중 두발과 휴대폰 소지 및 사용 문제에 관한 사안은 여전히 많다. 아직도 몇몇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와 관리의 대상이라고 여기며, 외모를 가꾸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학습에 방해가 되기에 금지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에는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 소지와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자기기 사용의 시간과 장소는 학교규칙을 통해 규제되지만,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는 학생이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학생은 두발 및 복장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으며, 학교는 이를 침해할 수 없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상담 요청이 있으면 해당 학교의 생활지도규정에서 과도하게 학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조례에 맞게 생활지도 규정을 개정하도록 돕는다. 하지만 입시를 중요시하는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인권 교육센터와 학생들의 개정에 대한 요청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상담요청은 많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학생과 교사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생활지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다움’에 대한 고정관념도 변화되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목표를 갖고 생활지도규정 제·개정에 대한 기준안 배포와 컨설팅 장학을 통해 학교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생은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에 학생의 입장에서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지 못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 직후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교가 조례의 취지에 맞게 생활지도규정을 제·개정하도록 요청하였고, 반드시 학생 의견을 반영할 것을 명시했다. 비록 제정 초기에는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지만, 몇 년 동안 서울시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득과 학생들의 요구가 모여 다시 제·개정을 진행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 참여하여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생활지도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한다.

“동등한 존중을 원해요!” - 차별과 혐오 해결 사례

A교사는 자신이 소속된 학교가 학생들을 성적에 의해 차별하고 있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해당 학교는 성적순으로 자습실의 자리를 배정하고 있었으며 매번 시험성적에 따라 자리를 이동시켰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시행한 조치라 하였으나 학생인권옹호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후 성적에 따른 자습실 자리 배정 규칙은 폐기되었다.

B교사는 수업시간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차이나’라는 발언을 하며 모욕감을 주었다. 교사는 해당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사에게 인권관련 직무연수를 부과하고 학급 대상으로 차이와 차별에 대해 전문강사에 의한 인권교육을 진행하도록 권고했다.

C교사는 토론 수업의 주제로 ‘동성애와 동성혼’을 선정했다. 이후 교사는 토론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인 표현을 통해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상담 및 조사요청이 있었고, C교사는 사과를 표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의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생인권 연수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사회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성적이라는 잣대로만 평가해왔다. 따라서 사람들은 성적에 따라 대우의 정도가 달라지는 차별의 문화에도 익숙했다. 학교에서부터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줄 세우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학벌과 경제적 수준에 의해 사람이 구분되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끼기 어려웠다. 차별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문화와 단절하는 첫걸음은 학교에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이에 학생인권조례는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학교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한 차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차별 관련 민원은 생각보다 적은 편이다. 이는 차별이 없어서가 아니라, 차별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소수의 사례이긴 해도 위에 열거한 사례들을 통해 학교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그동안 당연시되었던 성적에 의한 차별이 문제일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뿐 아니라 타인이 겪은 차별에 대해서도 문제를 느끼는 학생들이 있었다. 학생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약자인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많은 학생들이 함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례들로부터 학교 내에서도 차별 문제에 대한 감수성이 증진되는 등 희망적인 변화가 찾아오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금까지 민원신청이 있을 때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뿐 아니라 전 교직원이 인권연수를 듣도록 권고했다. 차별의 문제는 특정한 한 사람의 실수라기보다는 공동체 내부의 차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원인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차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다면 학생과 교사는 자신이 겪고 있는 차별을 더 많이 깨닫고, 차별구조 자체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등 조례에 열거된 21가지의 차별 사유만이 아니라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배우고 실천하게 된다면 이는 곧 한국 사회 전반의 긍정적 변화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신념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 양심·표현·종교의 자유 요구 사례

A중학교는 예배 및 기독교 문화행사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후 “기독교 교육에 동의하며”라는 문구가 포함된 회신서를 내도록 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는 종교 활동 거부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있

으며 불참자에 대한 대체수업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명확한 설명 없이 가정통신문 회신서의 문구만 보면 참가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일 여지가 있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들이 강요로 느끼지 않도록 종교교육은 선택이라는 문구를 넣을 것과 대체수업을 선택한 학생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학교 측에 권고했다.

B학생은 다른 학생이 저지른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 되어 생활지도부로 불러갔고 교사가 불러주는 대로 거짓된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강요당했으며, 이 문제에 대하여 학부모의 서명을 받아오라는 요구를 받았다. 또한 반성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까지 쓰게 하고 관련 교사에게 사과편지를 작성한 후 전달하도록 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이 상황에서 양심의 자유 침해가 인정된다고 교직원에게 인권교육 실시와 반성문 작성 등 학생지도 절차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학생에게도 자신만의 신념이 존재한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은 오랫동안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학생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주장을 할 때,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 그 학생의 배후가 누군지를 더 궁금해 했다.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하며 학생들이 가진 생각과 신념을 무시했기에 가능한 처사였다. 그렇지만 학생도 당연히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기에 자신만의 신념과 사상이 있으며 이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양심, 표현, 종교의 자유 조항을 포함하였다.

양심, 표현,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으로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상담요청이 접수된 사례는 많지 않다. 이 또한 침해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민원을 신청하기에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해당 항목과 관련된 극소수의 민원 중에는 종교 문제와 관련된 사안이 있었다. 한국의 사립학교 중 많

은 곳이 종교계 학교이다. 종교계 학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종교적 가치와 신념을 전도하는 것이다. 학교는 일반교과 수업이 아닌 종교 수업을 편성하고, 종교 활동을 강제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종교계 학교에서 종교 활동을 포기하는 것은 곧 건학이념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언급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이러한 건학이념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종교적 신념과 종교적 활동을 강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많은 종교계 학교는 이조차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보니 문제 해결도 쉽지 않다. 교육청으로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학생인권센터에서는 학생들이 종교 과목과 종교 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규정이 반인권적임을 설명하고 시정을 권고하지만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일은 거의 없다. 이와 같은 문제는 대부분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데, 현행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사립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권한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도 인간이기에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신념과 양심이 옳으나 그르냐에 대한 판단을 교사가 대신해 줄 수는 없다. 또한, 교사가 보기에 옳은 가치라고 해서 그것을 학생들이 강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 종교라는 높은 차원의 신념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대한 생각, 선과 악에 대한 개념까지 모든 것은 학생의 사유와 의지에 의해서 정립되어야만 한다. 교사의 역할은 학생이 사유할 수 있는 경험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사유의 방향에 영향을 주거나 조력하는 것과 강요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다. 그 차이를 알고 학생을 대할 때 학교는 비로소 건강한 토론의 장이 될 것이며, 학생은 서울시교육청이 목표로 하는 ‘교복 입은 시민’으로 완성될 것이다.

“징계를 하더라도 근거와 절차가 중요해요!” – 부당 징계 해결 사례

A학교의 규정에 따르면 흡연이 적발된 경우 ‘두발 시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두발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규제할 수 없으며 두발시정을 징계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였다. 따라서 학생인권옹호관은 해당 학교의 규정을 시급하게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우리는 흔히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말을 사용하곤 하지만 우리의 사법체계는 법과 절차에 따라 형벌을 부과한다. 하지만 한국의 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칙을 위반하면 인격을 내려놓은 채 학교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했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는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또한 학생에게 중요한 인권이라고 말한다. 이 조례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였다.

하지만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접수된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침해 민원 사안은 극히 드물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은 징계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어도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조차 어려워한다. 자신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ಗೆ 그 상황에서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는 데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한국 학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오랫동안 학교의 주인공은 공부를 잘하는 성실한 학생이었다. 그렇지 않은 몇몇 학생은 문제아로 불리며 성실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방해만 되는 불필요한 존재로 취급당

했다. 그리고 학생의 흡연은 그런 학생을 구분해 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왔다. 흡연하는 학생에 대한 처벌은 점점 더 강해졌으며, 흡연 적발이 누적될 경우 퇴학까지 가능했다.

처벌이 이렇게 강해졌는데도 학생들은 반발조차 하기 어려웠다. 교칙을 어긴 학생은 발언권마저도 빼앗기는 것이 학교의 문화였고, ‘잘못했으면 어떠한 벌이라도 받겠다’는 각오로 자숙해야만 했다. 정말로 학교는 어떠한 벌이라도 줄 수 있었다. 교칙을 위반한 학생에 대한 처벌 규정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학교의 재량이었으며, 처벌의 수위와 과정이 아무리 불합리해도 처벌받는 학생은 그것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렇기에 징계 등 절차에 관한 권리문제에서 서울 시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학생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해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의 상담 및 조사요청에 대해서는 위의 사례처럼 사안의 긴급성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일이 많아져야 한다. 또한 징계 절차가 공개되고 공개된 자료들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교육청의 기준안이 제시된다면 학교에서의 징계 절차도 인권침해가 없는 절차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 자치권은 학교 민주주의의 기본이죠!”

- 학생자치권 침해 해결 사례

A학교는 학생회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의 홍보물과 유세방송 원고를 검열했다. 교장이 모든 문서를 검토하고, 학생회 담당교사는 교장의 지시에 따라 학교에 대해 비판적인 부분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에 대해 해당 후보에게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수정요구를 거부한 학생이 당선되자 수정에 응했던 타

후보들은 공정하지 못했다며 선거무효를 주장했다. 해당 사안의 긴급구제요청에 대해 학생인권위원회는 검열에 대한 사과와 함께 모든 후보가 검열 없이 재선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자치 및 참여의 권리’는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다른 권리 조항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권리이다. 학생인권조례의 다른 권리 조항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을 학교에서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라면, ‘자치 및 참여의 권리’는 학교라는 조직 안에서의 학생의 위치와 활동영역의 근거를 마련해주는 조항이다. 그동안 학생은 학교의 정책 결정 과정과 자치 활동에서 정당한 권리와 지위를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

위의 사례는 그동안 학교에서의 민주주의 교육이 실천을 통한 교육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학생들의 투표로 이뤄지는 학생회장 선거에 교사가 개입한 사건은 학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학생회라는 기구는 있으나 학생회의 존재 이유인 학생자치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학생회 임원들이 학생의 대표자로서 학생을 위한 활동을 하는 대신 교사의 지도와 요구를 수동적으로 따라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학생회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이 일상적으로 자신을 검열하게 되며, 학생의 권한과 역할을 확장하기 어려워진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매우 개인적인 사안들에서도 학생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은 보충수업을 할지 말지, 아플 때 조퇴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수업 중에 화장실에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등

개인이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조차도 학부모와 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이런 학교 환경에서는 학생이 스스로 결정하고,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어렵다.

이러한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는 학생 자신도 ‘교복 입은 시민’이라는 자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그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처럼 학교의 많은 결정사항이 교사들의 협의만으로 이루어지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나 자문 과정 역시 학부모 대상으로만 제한된다면 학생은 진정한 시민이 될 수 없다. 학교에서의 민주주의 교육은 자치의 실천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학생회 자치권의 영역을 넓히고 학교 운영의 많은 부분에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학교 일상에서 자기결정권을 인정받는 경험이 더 많이 쌓여야 할 것이다.

실천이 있을 때 비로소 배움이 완성된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더 많은 실천이 더 많은 배움을 가능하게 한다. 지금까지의 민주주의 교육은 민주주의의 형식적 내용을 학습하는 데 그쳤다. 그러다 보니 정치와 민주주의는 일상생활의 원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놓치게 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이미 완결된 개념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토론과 합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과정 그 자체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고자 한다면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란 바로 학생자치이다. 학생과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의 토론과 합의로 학교 운영 방향을 결정하거나, 학생들이 직접 학생들의 생활에 필요한 규칙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민주주의 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한 학생회는 학생의 대표자로서 학생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토론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공개적으로 이뤄질 때 모든 학생은 학교의 민주주의 절차를 직접 목격하게 된다. 또한 각 학급의 학생들도 학급회의를 통해 학급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학생회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 원리를 몸소 배우고 깨닫게 된다. 이렇게 현재의 삶의 공간인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학습한 경험은 졸업 이후에도 삶의 원리로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서울 선곡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규정 개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고 있다.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복입은시민

프로젝트



학생자치 원탁토론 한마당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자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 지원 계획인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자치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학생을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 존중하고자 하는 시도가 담겨 있다.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이 성장과 배움의 주체로서 자기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생자치 활동을 지원 한다.

그간 학생회는 학생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싶어도 예산과 공간 그리고 활동 시간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학생회 운영비와 학생참여예산 등 학생자율예산 지원, 학생자치 활동 전용 공간 확보, 학급 자치 활동시간 확보, 학생회와 학교장 간담회 정례화 등 학생자치 활동의 실질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학생참여예산제의 운영을 통해 학생회에 학생회 예산 등 학생자치 예산 집행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 학생회 및 동아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공모하고, 이후 학생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심의한 후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은 학생과 학생회의 자율적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과 참여를 통해 자기결정 능력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학생참여위원회(학생 네트워크) 운영의 활성화, 학생자치 모델학교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다. 기존의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던 학생회, 학생동아리, 봉사활동 등을 포괄하여 지원하며, 나아가 학생 자치 활동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사회참여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변화를 끌어낸 학생과 교사의 이야기

“학생인권조례가
부당한 규정을
바꿀 근거가
되어 주었어요.”

휴대폰 강제수거에 대한
민원을 신청했던
김진범 학생



김진범 학생이 1학년일 때는 교내에서의 휴대폰 사용이 자유로웠으나, 1학년 말부터 휴대폰 사용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토론 과정이나 의사결정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은 채 갑자기 휴대폰 사용금지 규정 개정에 대한 가정통신문이 발행되었고, 2~3주 만에 바뀐 규정이 시행되었다. 학생들은 당장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이 인권 침해적 상황이라고 느낀 김진범 학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 옹호관의 존재를 알게 되어 상담 및 조사를 요청하였다. 조사과정에서 학교 측은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답변을 인정할 수 없었던 김진범 학생은 여러 차례 조사 요청을 반복했다.

“

오히려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니 모르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학습권 침해가 있었고 친구들과의 소통도 불편했어요.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없이는 친구들과 소통하기 어려웠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기 위해서는 어디서 보자고 연락을 해야 할 때도 있는데 불가능했습니다. 참 답답했어요.

상담 및 조사요청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교사, 학부모, 친구 모두 김진범 학생을 돕는 경우가 없었다. 학교에서 시행하는 것들에 반대해 본 경험도 없었고 학교와 싸워봤자 피해만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컸기 때문이었다.

“

주위 친구들 중에는 어차피 바뀌지도 않을 텐데 왜 그러냐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었고, 할 수 있으면 해 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 역시 괜히 문제를 일으켰다가 생활기록부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

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실제로 생활기록부나 다른 부분에서 피해를 받은 것은 없어요.

하지만 김진범 학생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학교 측으로부터 내년에 논의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1년 이상 반복된 조사 요청의 결과였다. 학교에서 규정을 수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난 후 현재 휴대폰 사용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다. 교사와 학생 모두 부당함을 인정한 셈이다. 학생인권조례는 부당한 규정에 항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 이를 통해 김진범 학생은 위축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떤 인권교육보다 값진 경험이었다.

“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고 좋은 점은 인권침해가 너무 심하면 따질 수 있는 게 가장 좋고, 학교에서도 너무 과하게 하지 않아요. 학교가 조례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

인권에 대해 알게 되니까 뉴스를 볼 때 더 관심 있게 보게 돼요. 노조들이 왜 파업을 하게 되는지도 알게 되니까 나중에 회사에 가서도 노조 생활을 할 의향도 생겼어요.

“그 사건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죠.”

학생회장 공약 수정 지시에 반대했던
김민혜 학생



김민혜 학생은 학생회장 선거 과정에서 공약, 포스터, 소견문에 대하여 학교 측으로부터 수정 지시를 받았다. 학교장은 모든 후보의 자료를 검토하면서 학교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나 기존의 학교질서를 깨뜨리는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

공약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자’였어요. 그리고 대위원회 회의 공개도 있었구요. 당시 생활지도부 담당이었던 선생님은 제가 걸었던 공약을 탐탁지 않아 했고, 모든 면에서 저에게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내 공약을 보고 ‘넌 지금 사랑하지 않는 학교를 다니는 거냐?’, ‘대위원회를 공개해 봤자 뭘 할 거냐. 지금도 나한테 찾아오면 회의록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김민혜 학생도 처음엔 공약수정을 받아들였으나 최종 연설문은 원안을 지키고 싶었다. 그리고 투표일의 마지막 연설에서 원안 그대로 진행했고 투표결과 회장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낙선한 다른 후보들이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연설을 했으므로 당선무효라고 주장했고, 김민혜 학생은 당선이 취소될 위기에 몰렸다.

“

학생회 담당 교사에게 소견문 파일을 메일로 받았는데, 제가 쓴 글에서 지을 것들 짝 다 지우고 바뀐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본인이 바꿔준 것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선도부 폐지 같은 것어요. 그런 건 학생회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설명도 같이 있었죠. 그런 작은 수정만 했으니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켜줬다고 하는데, 어차구니가 없었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이게 뭔가 싶었죠. 그래서 당일, 처음에 썼던 그대로 소견문을 발표했어요. 딱 하나, 생활지도부에서 이렇게 검열을 당했었다는 말을 앞에 추가했죠.

김민혜 학생은 평소 인권에 관심이 많아 보였던 교사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 교사는 학생인권교육센터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당시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이 없던 시기여서 구제 절차가 어려울 수 있었지만, 다행히 긴급구제가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되어 학생인권위원회가 재빨리 소집되었다. 회의 결과 위원회의 이름으로는 최초로 학교에 구제 권고가 내려졌다. 권고안에는 학교장이 사과할 것과 모든 후보가 검열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재선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위원회의 권고 이후 재선거가 실시되었고, 김민혜 학생은 부회장에 당선되었다.

“

나는 망했고, 학교를 자퇴하는 것만이 답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제도적인 지원보다 나에게 괜찮다고 해줄 선생님 하나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학생회 활동을 하며 보람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있었다. 학교와 다투는 과정에서 학교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거나, 당선 이후에 교사들의 견제가 이어지기도 했다. 선거 시작 단계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은 탓에 김민혜 학생도 많이 지쳤고, 자신에 대한 평가와 편견을 의식하며 움츠러드는 순간도 많았다. 그러나 그 아쉬움을 풀어내는 과정이 지금과 앞으로의 김민혜 학생에게 중요한 과제와 목표가 되기도 했다.

“

물론 그 상황은 아직도 악몽으로 꿀 정도로 나빴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었기에 남들과는 다른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대학에서도 강의 시간에 친구들이나 교수가 이상한 얘기를 하면 손들고 싸울 수 있게 됐죠.

“

그 일이 있은 후 첫 번째 목표는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평생 예민하게 살자’가 목표였어요. 이제는 예민하면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자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꿈이 생겼어요. 변호사, 노무사, 또는 약자를 도와주는 검사가 되고 싶어요. 그때는 철저한 약자였고, 지금도 약자고, 앞으로도 약자가 되겠지만 약자에게 법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대학에 왔고, 그래서 이제는 로스쿨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99%의 학생이 상처받는 일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죠.”

성적에 의한 차별 시정을 위해 조사를 신청한
고상훈 교사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접수되는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다. 교사의 비율은 2%가 되지 않는다. 교사는 학생의 인권 침해를 목격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상황을 회피하거나 부정하고 있다. 문제를 알면서도 내부고발자가 되고 싶지 않아 회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성적향상, 대입, 취업과 같은 목적을 위해 학생인권은 조금 침해되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교사와 학교 관리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성과를 우선시할 뿐 인권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된다. 고상훈 선생님의 학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고상훈 선생님은 기꺼이 내부고발자가 되었다. 그는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여러 차례 조사를 신청했다.

“

성적으로 차별을 엄청나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습실을 성적대로 앉히더라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냥 랜덤으로 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안쪽이 공부가 잘 되고 시끄럽지도 않대요. 학생들도 자리가 시험 보고 나서 좋은 자리로 이동하면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낀대요. 대입 준비할 때에도 자기소개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담임만 보는 게 아니고, 교장, 교감이 공부 잘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문자메시지까지 챙겨줘요.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뭐가 되는 거죠.

교사가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민원을 신청하면 동료 교사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본인만 학생을 위하는 줄 아느냐’, ‘천천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학교를 시끄럽게 만드냐’는 질타의 시선이 강하다. 동료의식이 없다는 인식이 퍼지며 고립될 위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권을 지키는 싸움이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기 위해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존재가 중요하다.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솔직히 대화를 해야 할 게 있고 타협할 게 있고 시급하게 고쳐야 할 게 있는데, 인권 관련된 거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1%의 학생들을 위해 나머지 99%의 학생들이 상실감과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건 대화와 타협으로 할 게 아니죠. 아파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기다리라고 할까요?

“

학생인권옹호관 제도가 참 좋아요. 학생인권을 옹호하겠다는 역할이 짝아요. 직접 사안을 조사하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옹호관의 존재가 힘이 돼요.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휴대폰 관련 공문을 보냈어요. 휴대폰 압수는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학교 교칙이 어떻게 간에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말이 고마웠어요. 학교 측에서는 교칙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교칙이 인권이나 상위법보다 위에 있다는 거죠. 제가 학생부장이나 교육지원청 장학사에게 소지품 검사를 해도 되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학생, 학부모, 학생회장 등 주체들이 동의해서 교칙에 넣었으면 괜찮다고 해요. 교칙의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지 않는 것이죠. 학교와 교사들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교육청이 해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교사들이 담배 피우면서 면담했어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점점 변할 수 있을 거라 믿

어요. 학생인권에 대한 것도 점점 하면 안 되는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당연한 것이 되겠죠.

“비민주적인 학교에선
교사의 문제제기도
받아들여지지 않죠.”

학생인권침해 사건들을 외면하지 않은
이윤승 교사



이윤승 선생님은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신고한 경험이 많다. 학생회장 후보의 공약에 대한 검열과 그로 인한 피해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처음 신고를 했고, 그 후로도 학교의 생활지도규정, 선도부에 의한 학생들의 인권침해 부분이 있을 때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조사를 신청했다.

“

신고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교사의 경우엔 나 자신도 가해자가 되거나 가해 공범자인 경우가 많다 보니 학교의 문제가 있을 경우 학교 안에서 먼저 해결해보려고 시도하긴 해요. 하지만 학교의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적이지 않다 보니 학생인권에 대한 교사의 문제 제기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도움을 청하는 일도 많았어요.

“

서울시교육청이 기준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학생인권이 교권과 충돌한다든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청의 단호한 의지와 학생인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학생인권 사안에 대한 상담이나 조사를 신청하는 경험을 한 교사는 많지 않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있는 교사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처음엔 학생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교사 자신을 위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이다.

“

학생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곳은 교사의 인권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는 환경을 보다 보면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인권 침해도 깨닫게 되곤 해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청소시간을 보면 학생이 교실만이 아니라 교무실까지 청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방학 때도 한 학급씩 돌아가며 학교에 나와서 교무실 청소를 하죠. 왜 학생들이 교무실 청소를, 방학 때까지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학교가 시키면 학생들은 그냥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은 담임도 무조건 출근하게 했어요. 방학 중의 당직이 강제가 아닌데도 학생이 나온다는 이유로 출근하게 해요. 학생들의 방학 중 청소를 강제할 수 없게 되면 그날 담임도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학생을 강제로 시킬 수 없는 상황을 겪다 보면 자기 자신도 왜 그동안 학교장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고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겠죠. 결국 학생인권을 생각하다 보면 교사의 인권에 대한 논의도 자연히 따라 오게 되어 있어요.

“

조례가 지정되고 학교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동의하든 안 하든 어쨌든 대부분의 교사가 학생인권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학생들의 반응도 빨리 나타나고 있어요. 아직 변화가 미약하긴 하지만 진심으로 변화된 교사도 보이고, 신고당할까 걱정하면서 조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하튼 학생들 앞에서 행동과 말을 조심하고 있으니 다행이죠. 앞으로 더 눈치 보고 더 조심하면서 학생인권에 대해 당연하게 느끼고 그에 맞는 학교 정책의 변화도 있었으면 해요. 가슴 아픈 학생들이 없도록 하루라도 더 빠르면 좋겠고요.



| 네 번째 이야기 |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학생인권 보장 체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제정으로 학생인권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교육청 내에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기구들이 설치되고,
관련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여기에서는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학생인권, 열망에서 규범과 제도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열망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생인권이 담론의 수준을 넘어 ‘규범화’와 ‘제도화’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인권은 학교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의 보편성 원칙은 국제인권법과 헌법에 근거한다. 하지만 개별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 조례 등의 규범을 통해 인권의 세부내용과 보장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행할 담당 기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인권의 지역화(localization)’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서울’의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범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1>에 제시된 인권의 이행체계는, 국제인권규범과 지역 차원의 인권규범, 국가의 헌법과 법률이 있더라도 지방 차원에서의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범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다.

조례 제정을 통한 학생인권의 규범화와 제도화는 학생인권이 공식적인 법에 의해 근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학생인권의 내용이 교육청 등 공식적인 기구와 제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제도화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망라한 포괄적인 입법으로 추진되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통한 규범화와 제도화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학생인권의 근거규범을 확인하고 학생인권의 구체적인 내용,

	세계	지역	국가	지방
규범	국제인권법 (예: 자유권규약, 아동권리협약)	지역인권규범 (예: EU인권협약)	헌법, 인권 관련 법령 (예: 국가인권위원회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조례 (예: 인권기본조례, 학생인권조례)
기구	국제인권기구 (예: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지역별 인권기구 (예: 아프리카 인권기구, 유럽인권재판소 등)	정부, 국가인권기구 (예: 국가인권위원회 등)	지자체, 지자체 인권기구 (예: 학생인권옹호관 등)

〈표1〉 인권의 이행체계

그리고 교육청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수행해야 할 학생인권 보장 책무를 확인하고, 2)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참여단 등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3) 학생인권의 제도화로서 학생인권 교육,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학생인권침해 사건 구제를 위한 절차를 규정한다. 아래에서는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고록 하겠다.

인권 보장 책무와 기준을 구체화하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근거규범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조례 1조는,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근거규범이며, 학생인권은 “대한민국 헌법, 법률,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인권은 보편적 규범으로서 국제인권법과 헌법, 법률을 통해 보장되지만,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서울 지역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규정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인권보장의 의무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여 학생 권리의 주체와 책무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그 다음으로 인권규범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규정한다(2장). 국제인권규범이나 헌법에 기본권의 목록이 제시되어 있지만, 학생인권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며 해석을 통해서만 구체화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조례에 구체적인 권리 목록을 규정하면 학생인권을 재확인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문화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도 교육기본법(12조)과 초·중등교육법(18조의4)에 기본적인 내용만 간략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학생인권을 구체화하는 것은 더욱 의미가 있다. 예컨대 <표2>에서 보듯,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헌법, 유엔 아동권

리협약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것이 학교와 학생에게 적용되려면 복장, 두발, 소지품 검사, 일기장 등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관한 원칙이 필요하다. 즉,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학생인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인 것이다.

근거 규범	내용
세계인권선언 (12조)	누구도 자신의 개인적인 일, 가족,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함부로 간섭받거나 명예 및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유권규약 (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p>서울 학생인권조례 (4절, 12-13조)</p>	<p>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p> <p>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p> <p>⑥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p>
---------------------------------------	--

〈표2〉 조례를 통한 학생인권의 구체화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사례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이외에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특별히 설치된 기구들

학생인권의 규범화·제도화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아무리 선언적 규정을 자세히 둔다고 해도 그것을 실행할 기구가 없다면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청에 몇 가지 기구들을 새롭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상적으로는 학생인권을 위한 별도 기구의 설치보다 교육청의 모든 기구가 학생인권을 위해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의 가치가 인권 보장이고 모든 국가기구가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학생의 인권은 모든 교육기구가 보장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에 관한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학생인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육청의 모든 자문기구가 학생인권을 고려하여 자문한다면 학생인권위원회가 굳이 존재할 필요성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인권이 모든 교육행정에서 구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을 ‘전담’하는 몇몇 기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설치된 기구가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참여단,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옹호관이다. 학생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에 관한 자문기구이고, 학생참여단은 학생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이며,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정책, 조사/구제, 교육, 대외 협력 등을 총괄하는 기구이다.

학생인권위원회



3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촉식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어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구체적인 업무로는 교육청의 학생인권 정책 방향과 업무에 대한 심의·권고, 학생인권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의 심의 및 구제조치 권고, 학생인권에 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공론화 활동, 학생인권 관련 보고서 발간, 긴급구제조치 권고 등을 수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분야의 전문가, 학생참여단에서 선출된 자,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신청한 자, 교육단체 추천을 받은 자, 학부모 단체 추천을 받은 자, 서울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그리고 학생인권담당 공무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1기 때부터 권리구제소위원회, 인권교육소위원회, 기획홍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그림1〉 참조).



〈그림1〉 학생인권위원회 조직도

학생인권위원회는 2012년 5월에 출범했다. 위원 임기가 2년이므로 2년마다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기수를 붙이며, 2018년 현재 3기 학생인권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학생인권위원회와 같은 심의·자문기구는 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권을 가지는 교육당국과의 관계에 따라 그 활동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2012년 5월 31일 출범한 1기 학생인권위원회(위원장 한상희)는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수시로 회의를 열어 조례의 이행을 촉구하고 필요한 제도를 확보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당시 보수적인 교육행

정체제 하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학생인권위원회가 서울시의 학교현장에 가시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은, 2014년 6월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한 후 같은 해 8월에 출범한 2기 학생인권위원회(위원장 정진성)에서부터였다. 2기 위원회는 새로 임명된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가 교육행정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했다. 2016년 10월 출범한 3기 학생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완)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조례가 교육청 업무 전반에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집중했고, 2017년 11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학생참여단



5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참여단 발단식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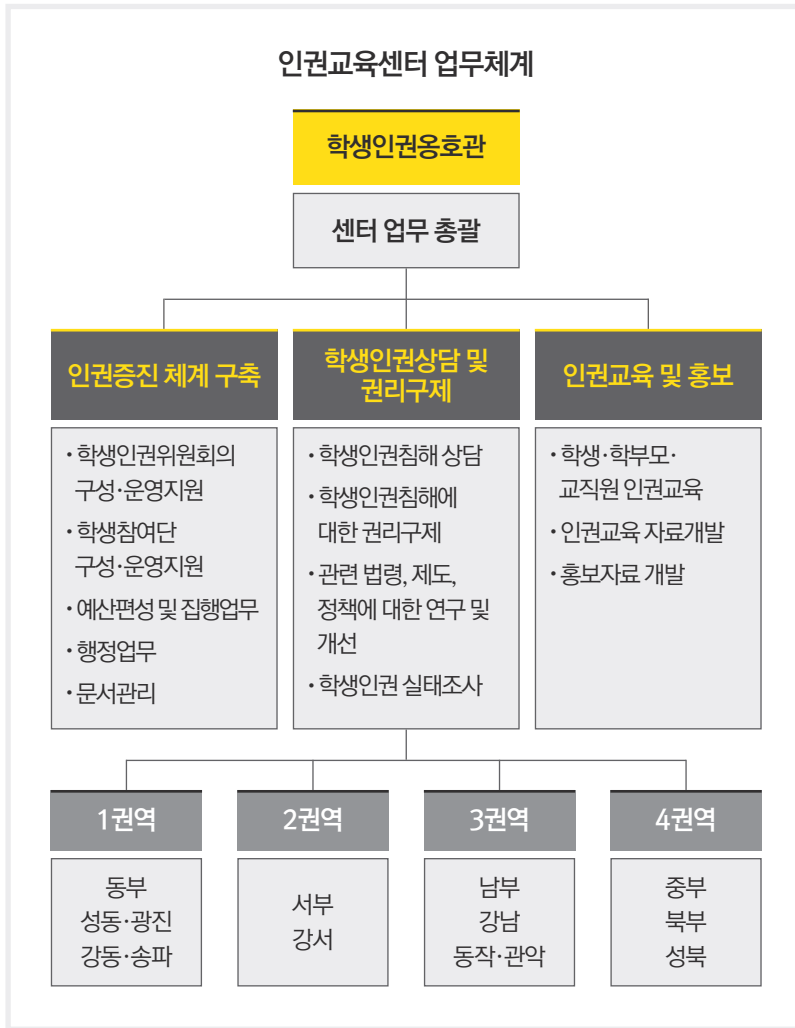
학생참여단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참여단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학생들을 추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된다. 소수자 학생 의견 반영을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통해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2012년 5월 17일 1기 학생참여단이 처음으로 구성되었으며, 매년 새롭게 선발하여 구성한다. 최근에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등의 회의와 함께 교육감과의 대화, 학생참여단 인권캠프, 학생인권조례 시행 기념식, 어린이·청소년 인권페스티벌, 어린이·청소년 희망총회, 서울 학생인권의 날 선포식 등을 주최하거나 참여해왔다.

학생참여단은 1년마다 구성원이 바뀌고 100명의 학생들이 집단 회의를 해야 하는 구조라 아직은 교육청이 학생 의견을 청취하고 참고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도 필요하다.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옹호관(이하 “옹호관”)은 교육청의 학생인권정책 사업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하며, 상임의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그 신분이 보장된다. 옹호관은 인권증진(정책 연구·개발), 인권침해사건 조사·구제, 인권교육·홍보 등 여타 인권기구가 수행하는 3대 기능과 함께,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센터장으로서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센터는 옹호관의 지휘를 받아 학생인권정책 연구, 학생인권침해사건 조사·구제, 실태조사, 정보·자료 수집·정리, 인권교육, 인권홍보, 대외 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2〉 학생인권교육센터 업무체계

〈그림2〉는 센터의 업무를 개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인권증진, 인권침해사건 조사·구제, 인권교육·홍보 등 3대 기능을 수행하며, 조사·구제의 경우 4개 권역으로 나뉘어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현재 센터에는 옹호관 1인, 사무관 1인, 장학사

1인, 행정주사 1인, 행정주사보 1인, 성인권정책전문관, 노동인권전문관, 인권조사관 4인(각 권역 담당) 등 11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2015년 처음으로 학생인권옹호관이 임명되었고, 2016년 3월에는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교육청 정책 수립을 위하여 성인권정책전문관이, 학생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인권전문관이 각각 임명되었다. 한편 2016년 3월, 기존 인권조사관의 신분을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옹호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쟁이 있었다. 옹호관의 임용과 직무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이하 “옹호관 조례”)라는 별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옹호관 조례에는 옹호관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고 독립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옹호관 조례 규정상 옹호관은 통상적인 교육청 소속기구라기보다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기구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옹호관은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에 소속된 것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인권정책 연구, 인권교육·홍보, 학생인권위원회/학생참여단 업무 지원 등의 업무는 일반적인 교육청 소속 행정기구의 업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인권침해사건의 경우 옹호관은 관계자들을 조사할 수 있고,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가해자, 관계인,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교육감과 학생인권위원회에게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단순히 특정 과 소속 기관이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이러한 옹호관의 권한이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다. 2013년 3월 서울시의회는 옹호관 조례를 통과시켰으나, 당시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대법원 무효확인소송 중이고 옹호관 제도가 교육감 권한을 침해한다며 공포를 거부했다. 하지만 옹호관은 인권침해사건을 조사

하고 판단하더라도 그와 관련한 조치사항은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을 뿐 이를 관철시킬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옹호관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2013년 3월 21일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옹호관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옹호관 임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혼란은 2015년 3월 초대 학생인권옹호관이 임명되면서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했다. 형식적으로 민주시민교육과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지만 학생인권 업무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특히 상담·조사·구제 업무의 특성상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이에 옹호관은 사실상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옹호관의 ‘권고’도 관계자들에 의해 점점 존중받고 수용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학생인권 구제 업무도 점점 안착하기 시작했다. 초대 학생인권옹호관으로 임명된 윤명화 옹호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학생인권옹호관으로 취임한 이후 박종훈 변호사가 사무관으로 임명되면서 조직체계가 정비될 수 있었습니다. 인권침해사건 조사와 권리구제에서 성과를 내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학교현장에 학생인권 홍보가 되기 시작되었고요. 인권센터 구성원들의 사기도 높아지고 교육청 안에서 위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최고기구인 서울교육협의회에 학생인권옹호관으로 참석하여 교육청 전반에 학생인권, 노동인권, 성인권 관련 정책모니터링을 공유함으로써 교육청 내 학생인권센터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인권교육센터는 민주시민교육과 소속의 팀으로 운영되기에 부담이 될 정도로 위상도 높아지고 역할도 커진 것이죠.

윤명화(서울시교육청 초대 학생인권옹호관)

실제로 2015년 옹호관 임명 이후 첫해 동안의 상담·권리구제 업무가 이전 해에 비해 두 배로 급증했고, 이는 옹호관과 센터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센터의 업무가 과중해지면서, 사건 처리 이외의 다른 학생인권정책, 인권교육, 홍보 등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청의 역할들

학생인권보장의 제도화는 학생인권침해 구제 절차, 학생인권 교육과 홍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업무 분담 등이 제도화되어 교육청 내 학생인권 업무가 공식화, 체계화되는 것을 뜻한다.

계획이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 :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인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평가하는 것은 모든 국가조직에 꼭 필요한 일로 여겨진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생인권조례에서도 교육감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제도화하는 총괄적인 청사진이 담겨 있다. 이 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며, ①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②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실천전략, ③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④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 교육 실시 방안, ⑤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문화 방안, ⑥ 교육부 및 타 시·도 교육청과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⑦ 학생인권종합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⑧ 그밖에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담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을 맡으며, 그 과정에서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7년 11월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을 발표했다. 2017년 3월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추진위원회와 TF팀이 구성되었고, 교육청 내 부서, 학생, 장학사, 학교장, 시민사회의 의견을 거쳐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1) 학생인권의 확인과 보장, 2) 교육구성원의 인권역량 강화, 3)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4) 인권 행정 시스템 활성화 등이 있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구제되지 못하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 학생인권침해 사건의 해결

학생인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학생인권침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다.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 영역과 조직별로 인권침해 사건 처리 절차와 이를 담당할 독립기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인권학계와 인권시민사회의 합의된 의견이다. 인권 보호를 위한 절차와 기구들은 보통 인권분쟁해결절차(human rights grievance mechanisms), 옴부즈퍼슨(ombudsperson), 비사법적 인권분쟁해결절차(non-judicial human rights mechanisms)로 불리며, 한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영역에서의 시민인권옹호관(서울)이나 인권옴부즈맨(광주) 등의 제도가 시행 중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옹호관(이하 '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는 구제 상담, 신고·접수, 조사, 심의·의결, 구제 조치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그림3 참조). 먼저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이나 다른 이가 옹호관에게 상담과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구제신청을 받은 옹호관은 조사에 착수한다. 옹호관은 교직원 등 관계인들에게 질의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조사를 수행한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옹호관은 가해자, 관계인 또는 교육감에게 1)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인권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3)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때 옹호관은 기본적으로 ‘설득’과 ‘자발적 협조’를 기반으로 인권침해사건을 처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침해 사건을 담당해온 박종훈 사무관은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그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인권침해사건이 접수되면 일단 학교에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관계인들을 만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당사자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이 안 되면 현장 방문 등 추가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 학교에 직접 권고하거나 교육감에 권고하게 됩니다. 권고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가해자나 관계인들이 인정하도록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학생인권옹호관이 권고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조사과정에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력 있는 조사와 결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답답할 수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아직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의 위상과 권위가 높지는 않아서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설득과 협조의 과정이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가



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훈(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사무관)

실제로 옹호관의 조치는 ‘권고’이며, 가해자나 관계인들에게 이를 따라야 할 강제적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다만 가해자나 관계인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유를 옹호관에게 제시하도록 한다거나, 교육감에게 그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식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인권침해사건 처리가 무력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인권존중문화를 확산시키고 정착시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부분도 많다. 인권침해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다른 음부즈맨 등도 그러한 이유에서 강제력 행사보다 설득과 협조에 의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옹호관은 강제력 없는 권고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가해자나 관계인들이 문제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수록 더욱 노력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가해자나 관계인들은 자연스럽게 학생인권에 관한 문제의식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황을 보면 2016년 한 해 동안 상담은 모두 1,431건이었으며, 구제 신청/접수는 총 236건이었다. 236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언어폭력 등(55건)이었으며, 그 외에 체벌(51건), 절차(징계) 26건, 사생활(25건), 개성(14건)등이 있었다. 구제신청 대상별 비율은 학생이 45%(108건), 학부모 32%(76건), 제3자 5%(11건)로 나타났다. 이 중 옹호관이 권고한 것은 36건이었는데, 이 중 34건이 이행되어 94%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학생인권에 관한 감수성을 높여라 : 학생인권 교육과 홍보

학생인권조례 시행 초기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사실상 인정되지 않았고,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홍보나 조례에 따른 인권교육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4년 조희연 교육감의 취임 이후 학생인권 교육, 홍보 업무도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직무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실, 인권특강,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문 발송, 학생인권조례 기념식,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행사 등의 사업이 수행되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성과와 남은 과제들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학생인권의 규범화와 제도화는 학생인권에 있어서 큰 진전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여러 학생인권 담당 기구들이 설치되고 학생인권정책이 제도화되었으며, 학생인권에 관한 인식도 점차 제고되기 시작했다. 각 학교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법률상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을 규범화하여 지방자치 단위에서부터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체제를 마련해나간 것은 전략적으로 유효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권보장의 과제가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역화’되고, 학교, 기업, 수사기관, 교도소, 군대 등 개별 영역에서 독자적인 인권보장체계를 확립하고 있는 최근의 동향을 고려해볼 때,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학생인권의 규범화와 제도화는 그 흐름을 선도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들이 지적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옹호관과 센터의 위상이다. 현재처럼 민주시민교육과의 산하기구로 두는 것이 적절한지는 시행 초기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다. 일단 옹호관이 인권침해사건을 처리하는 이상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현재처럼 산하기구로서 그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학생인권은 옹호관과 센터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교육청의 모든 부서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즉, 옹호관은 한편으로 교육청 내 하나의 부서로서 위상을 가지면서, 교육청 전체의 인권업무를 조정해야

하는 임무도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적 위상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옹호관과 센터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학생인권의 과제가 교육청 전반에 충분히 스며들지 못했다. 궁극적으로는 교육청의 모든 업무에서 학생인권의 내용이 반영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교육청 전체의 과제로 정착되어야 한다. 학생인권 교육과 관련해서도 아쉬운 측면이 있다. 학생인권의 과제가 현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결국 구성원들의 의식이 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안정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여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이제껏 나름의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결국 학생인권에 관한 상위 법률이 있을 때 좀 더 확고한 위상을 가질 수 있다. 물론 현행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상에도 학생인권에 관한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학생인권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시민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인권법 및 학생인권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학교와 유치원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②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다.
-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 상담, 돌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문화 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예체능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⑤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⑥ 학교의 장, 교직원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에 참여

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휴식권)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성적지향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할 경우에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그 정정이나 삭제, 혹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부정확한 경우
2.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3. 정보수집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4. 그 내용이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③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

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출할 권리
2. 학생총회,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사·의결할 수 있는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6. 다른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7.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은 부당하게 학생 자치활동을 금지·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수렴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

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정책결정과정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근로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식공간의 확보, 적절한 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의무교육과정에서의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

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피징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벌집계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의 결정 및 그 집행의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상당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이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당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 관련 사항에 관하여 학교의 장, 교육청, 교육지원청 그 밖의 관계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 등은 제2항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제1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제29조(학생인권교육)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모든 사람의 학생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학생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생인권교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근로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 시켜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0조(홍보) ①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의 내용 등 학생인권에 관한 일반인용과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 및 학생에게 이 조례 전문을 알려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9조제2항의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 홍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교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 서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연 2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직무 연수에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연 2시간 이상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및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절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

제33조(학생인권위원회) ① 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교육현장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학생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4.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5. 학생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교육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6. 학생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7. 학생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조사 보고서의 발간
8.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자문
9. 학생인권지원센터의 활동에 관한 평가
10. 그 밖에 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 수행에 있어 교육감 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인권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인권에 관하여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5명 이상
2. 학생참여단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 2명 이상
3. 시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4.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 2명 이상
5. 교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6.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7.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④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사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3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연 4회 이상
2. 임시회: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⑤ 위원회의 간사는 제34조제3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1명이 담당한다.
-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반드시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⑧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운영세칙)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학생인권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인권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학생참여단)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생참여단(이하 “참여단”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참여단은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천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참여단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 ④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 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 3.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 4.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 5.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및 그 권고에 대한 의견 제시
 - 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
 - 7. 학교규칙을 포함한 제반 학교규율에 대한 의견 제시

8. 그 밖의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교육지원청별로 참여단을 둘 수 있다.

제3절 학생인권옹호관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 1명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차별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의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는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 및 다른 사람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2. 학생인권옹호관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⑤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대한「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2.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3.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4. 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6. 학생인권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7. 인권교육에 대한 교재개발 등의 지원 및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8. 학생인권위원회 및 참여단의 업무 지원
9. 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10. 학생인권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

제40조(보고의무)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결과를 교육감과 학생인권 위원회에 매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겸직의 제한 등)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며, 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절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영향평가

제42조(학생인권교육센터) ①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유형 및 판단기준,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상황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4.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6.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에는 사무직원을 둔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을 매년 교육감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학생인권영향평가) ①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조례나 정책을 입안할 경우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또는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위원회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절 학생인권종합계획

제44조(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교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학생인권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2. 제1호의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실천전략
3.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4.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 교육 실시 방안
5.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론화 방안
6. 교육부 및 다른 지역 교육청과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7. 학생인권종합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8. 그 밖에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

제45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인권종합계획 수

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의 장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공청회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7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각 교육지원청 별로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③ 제2항의 학생인권상담실은 학생인권에 관한 상담과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접수를 담당하며, 그 결과를 매월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해학생 이외의 제3자가 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피해학생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구제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구제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 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제48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7조제1항의 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되는 당사자(이하 “피해당사자”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은 피해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조사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청 및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및 관계 공무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자료요청 및 질의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49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47조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인권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3.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의 결과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받아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가해자나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이나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⑧ 학생인권옹호관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계인, 교육감 등의 조치결과 및 통보내용,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한 권고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50조(비밀유지의무) ①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구성원은 제48조제1항의 구제신청과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와 관련한 심의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적인 성격이 강하여 관련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생이 시민이 될 때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바꾼 우리학교

발행인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기획 윤명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배현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장학사

민태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주무관

하형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

박은경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

자문위원 공 현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

김유진 효문고등학교 교사

김형완 서울특별시교육청 3기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동화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아디) 팀장

정병수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교육청 3기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정의석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사무관

함지훈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교사

집필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윤승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등학교 교사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전혜원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발행일 2018년 3월

발행처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담당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T.02-3999-083

제작 흑석동작업장